

#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

열린세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국민연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원화 약세가 뉴노멀이 되는 듯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 역할 때문이다. 통상 2월 또는 3월에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1월 26일 열렸다. 이번 기금위 회의는 개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미 정해져 있던 국내외 국민연금기금 투자 규모의 재배분이 중요 의제여서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 차관이 기금위의 정부위원으로 추가되다 보니 정부 입김이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게다가 관심이 집중됐던 회의 결과가 2030년까지 봉인된 상황이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짝막한 보도자료만으로는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추정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 대비 해외 주식 투자는 25조원을 줄이면서 국내 투자를 7조원 더 늘린다.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은 17조원을 더 늘린다.” 이는 전략적 자산 배분 목표치일 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 요인까지 고려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번 회의로 “목표 투자 비중 초과 시 자동으로 매도해 당초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인 리밸런싱 조치 작동이 유예되었다. 목표보다 국내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투자 비중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리밸런싱 유예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TF를 구성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환율 방어

를 해 오던 차에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신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청년층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었다. 몇 달이나 허비하고 나서야 구성된 특위 자문위원회는 특위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 개혁 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지 못해서다.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KDI 신승룡 박사는 국민연금 개방형 미적립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를 약 3009조원으로 추정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향후 70년 동안 매년 1% 포인트 더 높여도 미적립부채는 1236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징표다. 최근 IMF는 국

민연금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서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만 잘하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다. 시급한 구조 개혁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하면서 말이다.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돼 오던 기금위는 정치적인 외풍에 휘둘리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정책당국의 입맛에 맞도록 연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서다.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투자 비중은 줄이고,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그동안은 해 오지 않았던 환헤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서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의 코멘트다. “과거 관치금융이 재무부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배분과 투자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작금의 신관치금융은 국민연금을 축으로 해서 정부가 공공성과 책임 투자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특정 정권의 정책 수단이 아니기에 그렇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씨줄날줄

## 그래미도 품은 K팝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미국 3대 대중음악상으로 불린다. 각 음악상마다 정체성과 수상자 선정 방식은 다르지만 글로벌 음악 트렌드를 좌우하는 영향력과 권위는 공통적이다.

그래미 어워즈는 가장 유서 깊고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1950년대 음반업계가 영화의 아카데미상, TV의 에미상처럼 음악만을 위한 시상식을 만들고자 국립레코딩에술과학아카데미를 설립한 것이 시초다. 축음을 뜻하는 ‘그라모폰’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첫 시상식은 1959년 열렸다. 아카데미 회원들과 동료 음악인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술성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1974년 미국 방송사가 그래미에 맞서 만든 상이다. 팬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해 대중적인 인기를 가능하는 시상식으로 통한다. 1990년 시작된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빌보드 차트 성적을 기준으로 삼아

상업적 성공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K팝이 가장 먼저 정복한 음악상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 2013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톱 스트리밍 송’ 부문을 수상했다. 이어 그룹 BTS가 2018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상을 거머쥔 이후 5년 연속 트로피를 안았다. 그래미의 문을 최초로 두드린 K팝 가수도 BTS다. 2021년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올랐다. 2022년 ‘버터’, 2023년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로 연이어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다.

1일(현지시간)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첫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날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시상식 첫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래미까지 휩쓴 K팝의 저력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궁금하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사설

### 지역통합 속도전... 실효성 있는 시너지 방안 공론화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달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통합하면 4년간 각각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한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3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쫓기듯 이뤄지는 행정통합이어서는 곤란하다. 행정효율화와 지방권력구조 재편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최대 10년간 세금 추가 투입, 조직·인사의 자율권, 첨단산업 육성 과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

선 지원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통합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안에는 지나친 특혜로 보이는 조항들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 통합 후 10년간 중앙정부가 통합시와 산하 시·군·구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최대 25% 가산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런 대목이다. 통합시장에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무원 정원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는 이런 각종 특례에 더해 중앙정부가 대구·경북에서 거두는 국세

중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구난방식 특별법 남발에 앞서 행정통합에 관한 공통의 기준과 규정을 담은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지역별 특별법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통합 방안과 역차별을 호소하는 충북지역의 특별자치도 요구 등도 함께 수렴해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합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 오사카시(市)와 오사카부(府)의 통합이 추진됐으나 2015·2020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지방분권·지역균형 발전 전략이 아닌 선거용 이벤트로는 소지역주의나 역내 갈등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 통합에는 실패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통합시장직을 노리는 현직 광역단체장들이 공청회를 명목으로 지역을 남나들며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 불신을 초래해 통합 작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이 끼여어질까 우려된다. 차제에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견제역할이 부족했던 지방의회의 혁신 방안도 공론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중구난방 특별법, 통합 장애 우려  
국회 차원 협의, 주민투표 고려를

### 관세 압박에 워시 쇼크까지... 여야정 무조건 협력부터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연준) 의장에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더 증폭된다. 관세 협의의 차미국에 갔던 김경관 산업통상부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한 가운데 이목은 국회로 쏠린다. 여야가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서는 몰아닥친 관세 파고를 넘을 수가 없다.

워시 임명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어제 24.8원 급등한 1464.3원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일제히 급락했다. 금과 은,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귀국한 김 장관은 “(미 측이) 한국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이미 관보계재를 준비하는 등 관세 인상

의 실무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천하태평이다. 여당은 트럼프발 관세 불뚱이 떨어지자 2월 말~3월 초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선다. 대미 투자로 35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는 데 정부·여당이 특별법으로 비준을 우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은 미국이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조정했는데 이를 비준한다면 한국에만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국회의 입법 조치가 늦다는 빌미로 미국은 관세 폭탄을 때리려는데 이 판국에도 여야는 자존심 싸움을 하듯 판소리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80여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금융시장마저 불안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만큼 다급한 민생법안이 또 있는가. 여야는 이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만 한다.

### 고졸 임금, 평균의 70%... 이래선 ‘쉬웠음 청년’ 해법 없다

고졸·전문대졸 청년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20대 전체 취업자 평균의 70%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취업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같은 청년층 안에서도 출발선이 어디냐에 따라 임금과 고용 조건이 크게 갈리고, 그 차이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졸·전문대졸 취업자의 절반가량은 직원 9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고 전 일제보다 시간제 근무자가 많다. 4대 보험 가입률도 60% 수준에 머문다. 취업을 했더라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근무 조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수가 낮은 이유로 이직을 고민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반면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은 ‘탄 세 상’에 가깝다. 2024년 기준 대기업 대졸 사원의 초 임은 일본보다 41%, 대만보다 37% 높았다.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임금 인상과 성과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중 노동 구조가 굳어지면서 청년 취업의 경로도 갈라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기다리며 취업을 미루고, 다른 쪽에서는 단기 근무와 이직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경력이 축적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다. ‘쉬웠음’ 상태에 머무는 청년 증가 역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제 정책의 초점을 바꾸어야 한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고졸·전문대졸 청년이 주로 진입하는 일자리에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2년 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진 현실을 넘어 기업 간 이동과 직무 전환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판을 바꾸지 않는 한 청년 취업 문제 개선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